

소속부처	기획재정부	성명	조용래
훈련과정	학위	파견일자	2016.6.2
훈련국가	미국	보고분야	경제
보고 주제	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진 조세체계 구축		

## 1 연구목적

-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각각 OECD 국가 중 4번째 ('12년)로 낮은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과세제도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체계를 만들고자 함에 그 연구 목적이 있음
- 이에 따라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소득·법인·부가가치세에 대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조세부담 수준과 세수입 구성 및 과세체계 등 사례를 분석 및 평가

## 2 소득세제 관련 문제점 및 정책 제언

- (현행 조세부담 수준)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(17.9%, '13년 기준)과 국민부담률(24.3%)는 OECD 평균은 보다 각각 7.2%p, 9.9%p 낮은 수준임
- ⇒ (정책제언) 이는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향후 OECD 평균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임
- 다만, 추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에 대해 어떤 세목으로 어떤 계층에게 부담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동의를 필요

□ (소득세 재원 기능강화)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수 비중은 '16년 기준으로 총조세 대비 24.8%, GDP 대비 4.6%을 기록하여 OECD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평균(33.0%, '14년), GDP 대비(8.4%)에 비해 낮은 편

⇒ (정책제언)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소득세에 대한 조세 세입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됨

○ 다만,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현행 비과세·감면을 먼저 줄이고, 소득세율 인상은 추가적인 재원 필요시 후순위로 고려할 필요

□ (소득 재분배 기능강화)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및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

⇒ (정책제언)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에 기능 강화와 중산·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확대할 필요

□ (소득세 면세자 축소) 소득세 중 근로소득은 각종 비과세·공제 등으로 실효세율(근로소득 5.0%, 사업소득 14.5%)이 낮고 '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47%('15년 기준)로 높은 편

⇒ (정책제언) 비과세 및 공제·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 개세주의 실현을 위한 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할 필요

### 3 법인세제 관련 문제점 및 정책 제언

□ (법인세 재원 기능강화)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 세수 비중은 '16년 기준으로 총조세 대비 19.2%, GDP 대비 3.6%을 기록하여 OECD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평균(11.7%, '14년), GDP 대비(2.9%)에 비해 높은 편임

⇒ (정책제언) 이는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향후 OECD 평균 수준의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임

○ 다만,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인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

□ (법인세 재분배 기능강화)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64.5만 법인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%, 5%, 10% 법인의 소득금액 비중이 각각 결손법인 소득을 포함할 경우 94.7%, 110.0%, 115.2%를 차지하는 등 소득이 지나치게 편중

⇒ (정책제언) 비과세·감면을 정비하여 소득 상위 법인 중심의 실효 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리화 할 필요

#### 4 부가가치세제 관련 문제점 및 정책 제언

□ (부가가치세 재원 기능강화)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'16년 기준으로 총조세 대비 22.3%, GDP 대비 4.2%을 기록하여 OECD의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 평균(29.3%, '14년), GDP 대비(7.0%)에 비해 낮은 편임

⇒ (정책제언) 이는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향후 OECD 평균 수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임

○ 다만,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통일 대비 조세 여력 확보 등 미래 대비 목적과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

□ (부가가치세 면세 범위) 현재 우리나라의 면세제도는 저소득층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OECD 국가 등과 비교할 때 광범위하게 운영 중에 있음

⇒ (정책제언)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운용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며,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정부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